

때 이른 폭염... “역대급 무더위 올 수도”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엘니뇨 시작...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영향 “강한 폭염 빨리 시작돼 오래 지속될 수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더위가 오는 7~8월 ‘역대급 무더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영서중부, 전라권내륙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올랐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도(홍천 팽지, 춘천) ▲전남(담양) ▲전북(완주) ▲경북(구미·영천·군위·칠곡·김천·상주·의성) ▲광주 ▲대구 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엔 서울 전역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해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6월 25일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이상 빨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른 폭염이 찾아온 것은 이상 기후로 인한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라니냐(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현상)와 번갈아가며 3~7년 주기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가량 높으면 엘니뇨로 본다. 지난번 엘니뇨는 전 지구적 무더위가 찾아왔던 2016년 발생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학과 교수

는 “올해가 엘니뇨가 시작되는 해”라며 “이 시기에 초여름부터 여름 중순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이 빠르고 평년에 비해서 강한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지대로 수증기 벨트가 형성되고, 대기의 흐름은 고기압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순환한다”며 “이 수증기들이 적도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와 하늘을 덮어버리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 역시 “이른 폭염 특보 발효 및 열대야 관측 이유는 지구 온난화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 그런 추세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빨리 확장될지, 아니면 남동쪽에 머무르며 정체 기간을 가질 것인지에 따라 강수

량과 더위의 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동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면서도 “이 추세라면 강한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폭염이 짧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측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 통보관 역시 “기상청 예측 결과,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40%, 높을 확률도 40%”라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존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수증기가 계속 대기에 머무르면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질 열대야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광양경찰, 백운초 등곳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광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백운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경찰,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행사 협업 등 경찰체험활동

순천경찰은 지난 17일 순천청년회회소가 주관하는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 행사를 후원, 참석한 부모와 어린이 1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범죄·학교폭력 및 마약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진도경찰, 진도초교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위한 캠페인 실시

진도경찰서는 지난 14일 진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교육청·진도초 교직원 및 녹색어머니회원 30여 명과 함께 등곳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함평경찰, 삼애·엄다어린이집 경찰서 현장체험 실시

함평경찰서는 지난 15일 경찰서를 방문한 함평읍 소재 삼애어린이집 원아 44명과 엄다면 소재 엄다어린이집 원아 1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함평=김광훈기자



강진소방, 고흥사랑기부제 ‘주택화재안전꾸러미’ 서비스

강진소방서는 소방서장 등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강진군에 고흥사랑기부제 200여만원을 기부하고 담례품 취약계층 20가구에 주택화재안전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해경,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해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16일 경찰서와 전운부두에서 단체 헌혈을 통해 따뜻한 생명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내달 본격 시작...1심 징역 2년

매일 셋째주 예정...청탁금지법 혐의부터 다룰 듯 檢 “조국도 제3차 증거은닉 공모...실체 밝혀달라” 조국 “입시비리, 증빙된 부분까지도 유죄로 판단”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중앙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모두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내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매일 셋째주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의 중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으로 나뉜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

분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제3자를 통한 증거은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주도권은 조국에게 있고 정경심은 (증거은닉을)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입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시국에서 증거은닉에 필요한 어떠한 대응도 조국의 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원심은 외면하고 있으나 정경심은 당연히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교수인 남편에게 물었을 것”이라며 “증거은닉 범행에 책임이 있는 조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실체에 부합하게 해달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

련해 학업 활동 등 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지도교수로서 조민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혐의를 받는 노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이슬비기자



수능 ‘킬러 문항’ 9월 모평부터 사라지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무 당 정협회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 배제와 적정 난이도를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1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킬러문항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 “공교육이 아니라 장외에서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밝혔으며, ‘킬러 문항’은 오는 9월 모의평가부터 배제될 방침이다.

“건보료 깎아 달라” 역대 고소득자 작년 9월 정산제 도입 후 크게 줄어

지난해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별도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 후 건보료 회피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고소득자(연소득 1억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자 중 건보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례는 3만4290건으로 1년 전(4만8800건)보다 1만4510건(29.7%) 감소했다. 제도 도입 후 기간만 따져보면 지난해 9~12월 건보료 조정 건수는 1만26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5571건)보다 1만2961건(50.7%) 감소했다.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1~8월 조정 건수가 1년 전보다 6.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년 간 건보료 조정인원은 3만5318명에서 2만1137명으로, 조정 소득금액도 6조2603억원에서 4조529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제도 도입 후인 9~12월 조정인원은 2만1201명에서 8644명으로 1만2557명(59.2%), 조정된 소득금액은 3조7426억원에서 2조1140억원으로 1조6286억원(43.5%) 감소했다. 그간 역대 고소득자 중에서도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건강보험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50만7771명→2021년 53만

8648명→2022년 63만9963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해 더 걷는 사후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등에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건보료 조정 악용을 막은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연인 A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작년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축) 증명서를 제출해 건보료를 조정해왔다. 이런 식으로 총 8202만7800원의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나 정산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11~12월 410만원씩, 올해는 441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내고 있다.

인터넷방송 B인 B씨도 소득이 있는데도 매년 퇴직(해축) 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로 등재해 2534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현재는 직장가입자로서 매달 약 8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작가 C씨는 소득이 없다며 퇴직(해축)증명서를 내고 건보료 조정 신청을 내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12개월 간 796만원의 건보료를 회피했다. 제도 도입 후 올해는 매달 약 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뉴스

